

# ‘로비·비자금 의혹’ 정치인 소환 초읽기

스테이트워셔 골프장의 로비 의혹과 ‘대한통운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주부터 정치인들을 줄소환할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이 긴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골프장의 로비 의혹과 관련, 골프장 회장 공모(43·구속)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공성진, 현경병 의원을 조사하기 위해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 의원 등은 자신 출석 형태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 의원의 후원업체로 알려진 L사, C사와 공 의원이 명예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사무실 압수수색

## 檢 공성진·현경병의원 등 출석일정 조율중 ‘대한통운’ 한명숙 의회 관련 계좌추적 확대

및 관련자 계좌추적 등을 통해 공 의원이 역대 의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잡고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검찰은 2007년 한나라당 최고위원 경선 때 공 의원의 참모로 일했던 측근 엄모씨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 그가 비자금 조성 및 전달 창구 역할을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 의원의 후원업체 가운데 하나인 전기차 제조업체 C사가 최대

주주인 군인공제회와 특혜성 계약을 맺은 정황도 파악,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같은 당 현경병 의원에 대해서도 골프장 회장 공모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는지 조사하기 위해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공모로부터 수천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현 의원의 보좌관 김모씨를 4일 체포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5일 밤 석방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권오성 부장검사)는 과영욱(69·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지난 2007년 무렵 수만 달러를 제공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계좌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과씨와 한 전 총리에 대한 계좌추적 등 주변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 짓고 이르면 이번 주 한 전 총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민주당 등 한 전 총리 측이 ‘정치적 탄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검찰은 과 전 사장이 옛 정권의 실세 정치인이었던 J씨와 K씨 등에게도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연합뉴스

# 북·미 합의 땀 내년초 6자회담 재개

## ■양자대화 어떻게 될까 대화결렬땐 긴장 재고조 낙관·비관론 등 안갯속

8일부터 2박3일간 평양에서 열리는 북·미 양자대화는 북핵사태의 큰 흐름을 가를 중대 분수령이다.

사그라드는 6자회담의 불씨를 되살려내 ‘협상국면’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도발과 제재가 충돌하는 ‘대결국면’으로 되돌아가느냐의 갈림길이다.

현재로서는 전문가들조차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는 안갯속 형국이다.

◇북·미 합의→6자회담 재개 = 북한이 이번 대화에서 6자회담 복귀를 선언하고 이를 토대로 6자회담이 재개되는 수순이다.

또 노련한 협상기술을 가진 북한이 ‘깜짝 선물’을 내놓고 답관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즈워스 대표가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소지하고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측의 답안이 순조로울 경우 내년초 곧바로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미간 일괄타결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관망이 나온다.

◇대화 결렬→긴장 재고조 = 북·미간 대화가 기약없이 결렬되는 시나리오다. 미국의 6자회담 복귀 요구에 북한이 선(先) 평화협정문을 내세워 거부하고 추가대화 합의도 성사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 미국과 국제사회는 한 동안 내려앉던 제재의 칼을 다시 들어 북한을 옥죄고 북한 역시 도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특사직격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평양을 방문할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카드로 맞서며 긴장국면을 조성할 공산이 크다. 물론 후속대화 가능성도 있지만 미국은 ‘단 한번’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강조점이다.

◇합의 불발→후속대화 재개 = 이번 대화가 가시적 성과 없이 끝나더라도 후속대화가 이어지며 대화의 동력이 유지되는 시나리오다. 서로의 입장차가 크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화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북·미 양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현실성이 높은 선택이라는 풀이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이번 대화는 서로의 입장을 탐색해보는 전초전에 그치고 내년초에 가서 후속대화가 열려 큰 틀의 합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격을 한단계 높여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참여하는 북·미 장관급 대화가 내년 1, 2월 열릴 것이라 시나리오도 등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명숙 수뢰설...친노 재결집 계기되나

대표적 친노인사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계기로 분화 움직임이 보여오는 친노세력이 재결집하는듯한 분위기다.

법친노계 모임인 ‘시민주권’ 대표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 친노신당인 국민참여당에 입당한 유시민 전 복지장관, 민주당 안희정 최고위원과 이광재 의원,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노 핵심 인사들은 지난 4일 한 전 총리 수뢰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비상연락망을 가동, 곧바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친노세력은 7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인사, 참여정부 참모진 출

## 이해찬·유시민·문재인 등 비대위 구성 대응 나서

## 민주당 42명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 중단” 촉구

신, 시민사회 원로 등 특정 정파를 뛰어넘는 대규모 비상대책위를 구성, 한 전 총리 문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노 전 대통령을 둘러싼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이은 또 다른 야당 파괴 공작 및 ‘표적수사’로 규정,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각오다.

친노 핵심 관계자는 6일 “이번 사

건이 최근 진로와 노선을 놓고 이견을 보여오는 친노세력을 다시 묶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며 “한 전총리 문제에 대해 민주당과도 적극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가 일정한 상황에서 정치인 비리수사에 대한 비호를 어느 선까지 해야 할지에 대한 논란이 당 일각에서 일고 있어 일사불란한 야권통합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한편, 민주당 소속 의원 42명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검찰과 일부 언론은 우리 민주당의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인 한 전 총리를 흠집내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검찰과 일부 언론의 ‘한명숙 죽이기’ 정치공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아들은 이어 “검찰은 스스로 ‘피의 사실 공표’와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렸다”며 “실정법을 위반한 검찰에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하며,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는 국민의 심판을 엄중히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 구의회 의장이 농협 조합장 출마 ‘구설’

## 광주 북구의회 구희호 의장



구 의장은 의원이 되기 전인 지난 1987년부터 10년간 북광주농협 조합장을 지냈으며, 이번 출마와 관련해 “농협으로 다시 돌아가 농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북광주농협 조합장 선거는 오는 11월 치러지며, 구 의장이 당선되면 내년 1월 중순에 임기 4년의 조합장에 취임하게 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농협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 의장은 조합장 취임 전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회

의장이 이익단체 선거에 출마해 지역가에서 비난의 여론이 높다.

특히 전임 의장이 ‘뒤틀린 선거’로 동료 의원들에게 의장직에서 쫓겨난데 이어 후임 의장마저 취임 9개월만에 이익단체 선거에 나서면서 북구의회는 또 다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됐다.

지역정가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문제될 게 없더라도 의장 신분을 지니고 출마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명예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 전남 20개 시·군 “여권 신청 가능해요”

## 내년부터 대행기관 확대

전남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여권 발급 대행기관을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도내 여권발급 신청은 현재 도청과 여수, 순천, 광양, 영암 등 4개 시·군에서만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도청 인근인 무안과 신안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에서도 여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증을 하게 된다. 또 여권 발급 수수료 납부는 그동안 현금결제만 가능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와 처리비용 증빙 등을 위해 신용카드도 받기로 했다.

신용카드 서비스는 내년 1월 전 국 시행에 앞서 지난 9월부터 전남도청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갔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된다.

본인 여부의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여권을 신청하는 18세 이상 인 사람은 지문을 채취해 본인 인 /홍행기기자 redplane@

**전출산 극복!**  
**전라남도가 함께합니다!**

아기 탄생의 우렁찬 울음소리는  
**“미래 녹색 전남”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 만들기 운동”에  
혼·도민이 함께 참여합니다.】

**전라남도**  
Jeollanam-do